2024.12.16.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16호

미래사회 인식의 연령집단별 비교와 시사점

민보경(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16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12월 16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서론 02

02 방법 03

03 결과 04

04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연령집단 간 인식 차이 10

05 결론 12

요약

현대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중장기적 국가 의제 설정이 필요

- 사회적 전환기에는 집단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본 연구는 연령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미래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5-69세 14,397명을 세 집단(10-20대, 30-40대, 50-60대)으로 구분하여 분석
- 집단간 사회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

분석 결과

- (인구변화) 10-20대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 10-20대는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감소를 우려했으며, 50-60세대는 안정적 노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
-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10-2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의료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사용 신뢰도가 세 집단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나 생활 불편 수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10-20대는 비용 부담을, 50-60대는 생활의 불편을 더 감수할 의향을 나타냄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적 접근과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
- (결혼·출산·육아)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정년연장과 노후 보장)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과 노동 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정년 연장을 청년 고용 확대와 연계하는 정책적 조정 필요
- (디지털 전환) 고령층을 포함한 기술 소외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 (기후변화) 세대별 정책 수용성 차이를 반영한 비용 분담 모델, 생활밀착형 친환경 프로젝트 확대

01 서론

■ **미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국가 의제 설정 및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 증대**

○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이 요구됨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향설정 및 정책설계 필요함
- 사회발전의 전환기에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 사회의 미래 주요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환경 변화와 세대간 인식의 차이, 자원 배분을 둘러싼 형평성 이슈의 등장**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불평등, 산업구조 재편 등 복합적인 사회변동으로 인해 한정된 사회경제 자원의 세대간 분배 문제 발생 가능

- 200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는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연금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황선재, 2022)
- 기성세대들의 문화와 전통을 미래세대에 강요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서로 단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전상진, 2010; 구본현·이윤석, 2021, 재인용)
- 한편, 세대간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경험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화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함(박재흥, 2010)

■ **연구질문: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연령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까? 미래사회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세대간 갈등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연령집단별 인식을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집단간 차이와 특성을 발견하고 미래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 대한 연령집단별 인식을 검토하기 위해 2024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미래인식·가치관조사 문항에 응답한 결과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10-20대, 30-40대, 50-60대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1] 미래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함

1) 세대의 의미는 1)'부모세대'와 '자식세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 계승의 원리로 사용하는 경우, 2)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령층을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cohort)을 의미하는 경우, 3)'청소년세대', '노인세대'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경우, 그리고 4)'전후세대', '4·19세대'처럼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일컫는 경우 등이 있으며, 세대라는 개념은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구본현·이윤석, 2021). 본 연구는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연령에 따라 10-20대, 30-40대, 50-60대로 구분하였음.

02 방법

■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2]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만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틀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
- 조사방법은 가구 방문하여 가구원 전원을 면접 조사하였고, 조사 완료된 전체 표본 수는 총 7,766가구의 16,897명으로 본 연구는 그 중 15-69세 14,397명(15-29세 3,036명, 30-49세 5,269명, 50-69세 6,092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 실시

■ 자료분석 방법

○ 미래사회 인식에 대한 15-29세(10-20대), 30-49세(30-40대), 50-69세(50-60대) 등 세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실시

- 미래사회 인식의 집단간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미래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2) 2024년 「국민미래인식·가치관 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기존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기반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024년에 실시한 조사로 그 결과는 「2024년 국민미래인식·가치관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로 발간하여 2025년 1월에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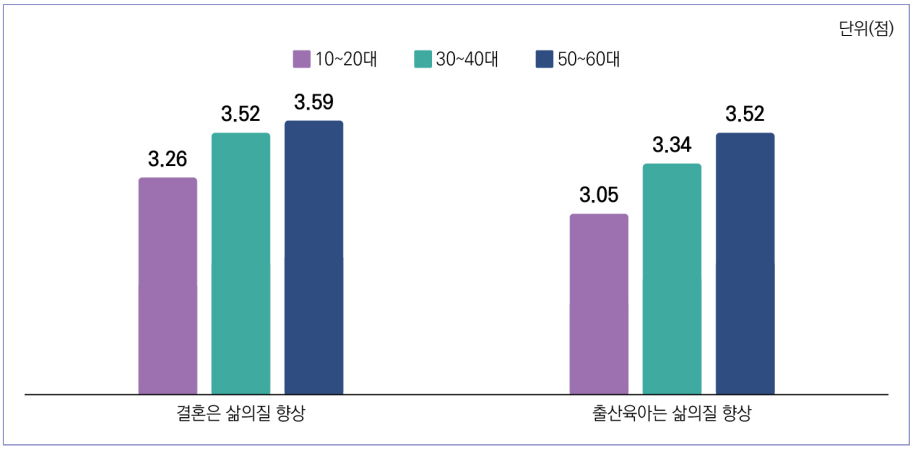
03 결과

1. 인구변화와 미래사회

■ 저출산

- ‘결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에 대한 동의수준은 50-60대가 가장 높고, 10-20대가 가장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10-20대 3.26점, 30-40대 3.52점, 50-60대 3.59점으로 세 집단 모두 3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높은 경향을 확인함
- ‘출산·육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에 대한 동의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 50-60대가 가장 높으며, 30-40대, 10-20대 순으로 나타남
  - 10-20대는 3.05점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30-40대는 3.34점, 50-60대는 3.52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 결혼, 출산·육아와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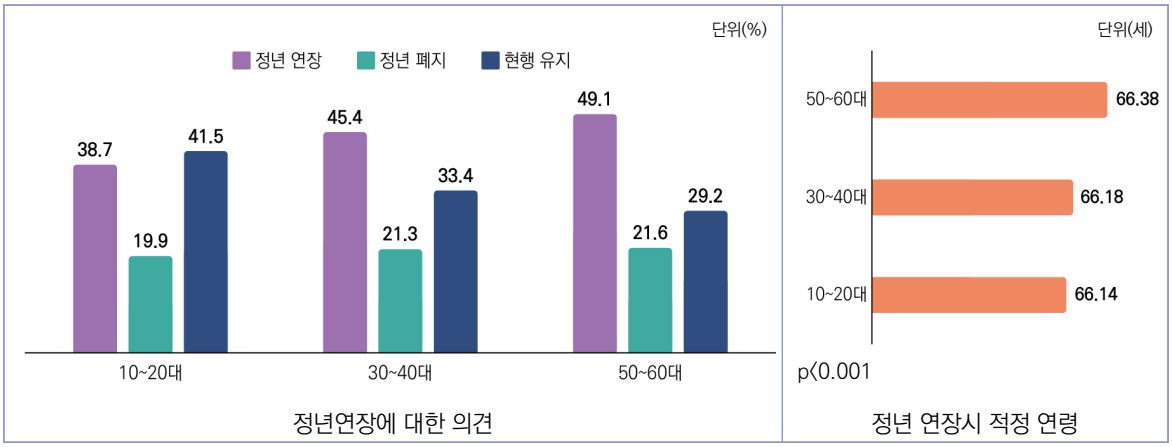


■ 고령화

- ‘정년(현행 만60세)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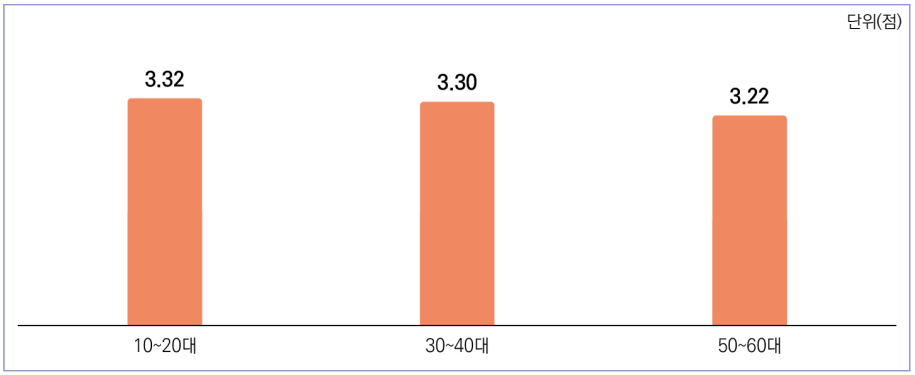
- 10-20대 정년연장의 응답 비율은 38.7%, 정년 폐지 19.9%, 현행 유지 41.5%로 현행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40대의 응답 비율은 정년연장 45.4%, 정년 폐지 21.3%, 현행 유지 33.4%
- 50-60대는 정년연장 49.1%, 정년 폐지 21.6%, 현행 유지 29.2%로 나타나 현행 유지에 대한 비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음
- 정년 연장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적정 연령을 질문한 결과, 10-20대는 66.14세, 30-40대는 66.18세, 50-60대는 66.38세로 세 집단 모두 약 66세로 나타남

그림 2 정년연장 여부 및 적정 연령



- '퇴직연령을 높이면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50-60대의 동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세 집단 모두 평균 3.0점 이상으로 퇴직연령을 높이면 청년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0대 3.32점, 30-40대 3.30점으로 50-60세대 3.2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3 퇴직연령 높이면 청년의 일자리 기회 감소



○ '몇 살부터 노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세 집단 평균값은 모두 70세 이상으로 70-71세 정도로 나타남

- 각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10-20대 70.06세, 30-40대 70.56세, 50-60대 71.19세부터 노인에 해당한다고 응답함

그림 4 노인의 시작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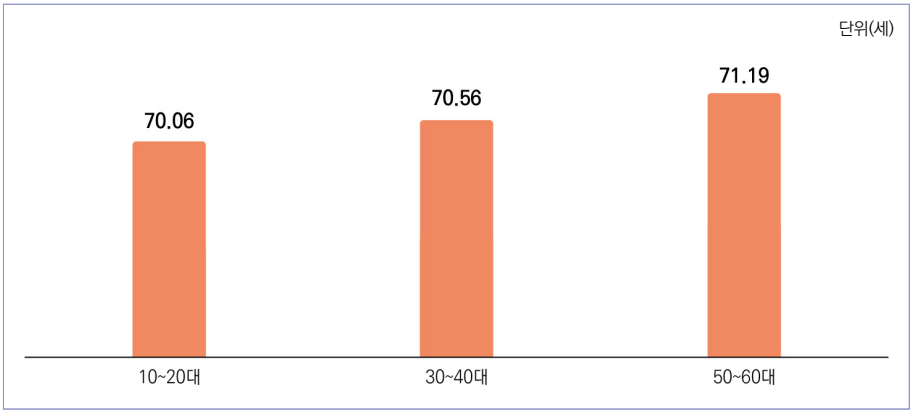


표 1 인구변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ANOVA)

구분	변수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저출생	결혼은 삶의질 향상	10-20대(a) 30-40대(b) 50-60대(c)	3.26 3.52 3.59	.800 .790 .789	176.220***	a<b<c
	출산·육아는 삶의질 향상	10-20대(a) 30-40대(b) 50-60대(c)	3.05 3.34 3.52	.842 .860 .813	331.978***	a<b<c
고령화	노인 연령	10-20대(a) 30-40대(b) 50-60대(c)	70.06 70.56 71.19	4.476 4.305 4.143	77.232***	a<b<c
	퇴직연령 증가시 젊은이들 일할 기회 감소	10-20대(a) 30-40대(b) 50-60대(c)	3.32 3.30 3.22	.929 .923 .934	16.359***	c<b,a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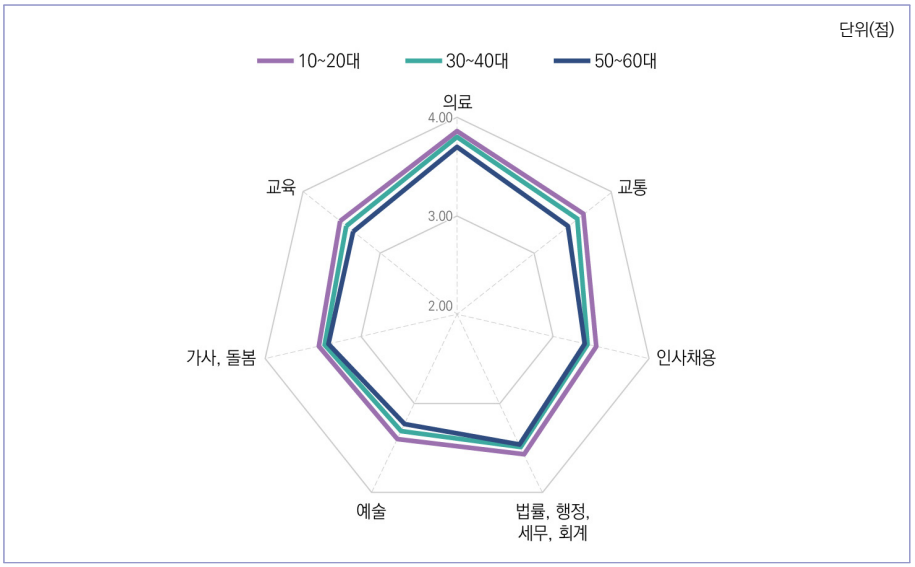
2. 기술변화와 미래사회

○ 자동화 기술에 대해 각 분야의 사용에 대해서 신뢰여부를 물어본 결과 세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10-20대의 동의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세 집단 모두 높은 편

- 자동화 기술의 '의료분야(진단, 수술, 치료 등)'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 3.86점, 30-40세대 3.80점, 50-60대 3.70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의료분야의 자동화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편임을 확인함

- 자동화 기술의 '교통분야'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 3.64점, 30-40세대 3.56점, 50-60대 3.44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확인함
- 자동화 기술의 '인사·채용분야'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 3.45점, 30-40대 3.36점, 50-60대 3.33점으로 세 집단 모두 3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자동화 기술의 '법률·행정·세무·회계분야'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 3.57점, 30-40대 3.49점, 50-60세대 3.46점 순으로 나타남
- 자동화 기술의 '예술분야'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는 3.40점, 30-40대 3.31점, 50-60대 3.23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
- 자동화 기술의 '가사·돌봄(노인, 장애인 등) 분야'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 3.44점, 30-40대 3.38점, 50-60대 3.34점으로 10-20대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자동화 기술의 '교육분야' 사용에 대한 신뢰는 10-20대는 3.52점, 30-40대 3.44점, 50-60세대 3.35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확인함

그림 5 분야별 자동화기술의 사용에 대한 신뢰



- '인공지능(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일자리가 생기기도 할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이 있는데,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기술 대체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공감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 일자리 변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10-20대 3.77점, 30-40대 3.79점, 50-60대 3.71점으로 나타나 50-60대의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기술변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ANOVA)

구분	변수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동화 기술 사용	의료분야 (진단, 수술, 치료 등)	10-20대(a) 30-40대(b) 50-60대(c)	3.86 3.80 3.70	.854 .873 .894	38.642***	c<b<a
	교통분야	10-20대(a) 30-40대(b) 50-60대(c)	3.64 3.56 3.44	.873 .904 .958	54.761***	c<b<a
	인사채용분야	10-20대(a) 30-40대(b) 50-60대(c)	3.45 3.36 3.33	.878 .869 .899	19.316***	c,b<a
	법률·행정·세무·회계분야	10-20대(a) 30-40대(b) 50-60대(c)	3.57 3.49 3.46	.852 .869 .902	15.945***	c,b<a
	예술분야	10-20대(a) 30-40대(b) 50-60대(c))	3.40 3.31 3.23	.936 .979 .987	29.385***	c<b<a
	가사·돌봄(노인, 장애인 등) 분야	10-20대(a) 30-40대(b) 50-60대(c)	3.44 3.38 3.34	.911 .926 .955	12.603***	c,b<a
	교육분야	10-20대(a) 30-40대(b) 50-60대(c)	3.52 3.44 3.35	.842 .857 .876	43.966***	c<b<a
일자리 정책	일자리 변화 정책 필요성	10-20대(a) 30-40대(b) 50-60대(c)	3.77 3.79 3.71	.695 .680 .711	17.343***	c<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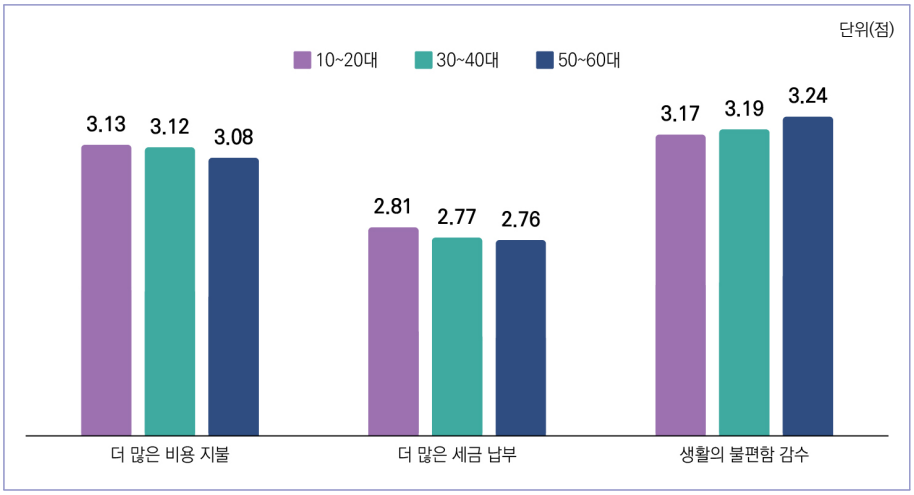
*p<.01, **p<.005, ***p<.001

3. 기후변화와 미래사회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50-60대의 동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세 집단 모두 평균 3.0점 이상을 보였으나 10-20대 3.13점, 30-40대 3.12점, 50-60대는 3.08점으로 전반적으로 동의수준이 높은 편은 아닌 것을 확인함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를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0-20대 2.81점, 30-40대 2.77점, 50-60대는 2.76점으로 10-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50-60대의 동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0-20대 3.17점, 30-40대 3.19점, 50-60대 3.24점으로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높은 편

그림 6 환경보호를 위한 수용 여부



○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10-20대 3.73점, 30-40대 3.73점, 50-60대 3.74점으로 나타남

표 3 기후변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ANOVA)

구분	변수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수용성	더 많은 비용(상품, 서비스 가격) 지불	10-20대(a) 30-40대(b) 50-60대(c)	3.13 3.12 3.08	.912 .935 .918	5.414**	
	더 많은 세금 납부	10-20대(a) 30-40대(b) 50-60대(c)	2.81 2.77 2.76	.940 .950 .939	3.436*	
	생활의 불편함 감수	10-20대(a) 30-40대(b) 50-60대(c)	3.17 3.19 3.24	.923 .913 .916	8.917***	a,b<c
책임성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	10-20대(a) 30-40대(b) 50-60대(c)	3.73 3.73 3.74	.694 .720 .705	.213	

*p<.01, **p<.005, ***p<.001

04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연령집단 간 인식 차이

■ 연령별 인식에 따른 주요 이슈

○ 연령별 인식 격차가 큰 이슈

-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 청년층(10-20대)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3.32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령층(50-60대)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고 안정된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정년연장 49.1%, 정년폐지 21.6%)을 보임
-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신뢰 및 일자리 대체: 세 집단 모두 기술 대체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공감하고 있으며, 일자리 변화 정책의 필요성은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음. 자동화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도는 세 집단 모두 의료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예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환경정책 수용성과 책임 분담: 청년층은 환경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3.13점) 반면, 고령층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3.24점)

○ 공통적 특징

- 노인기준 상향: 연령 설정에 대한 차이는 다소 있지만, 세 집단 모두 노인 기준 상향(70세 이상)에 동의하며, 노후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세 집단 모두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편이며, 의료 분야의 기술 사용 및 신뢰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인식: 세 집단 모두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높은 동의(평균 3.74점)를 보임

■ 미래 이슈의 갈등요인

○ 이슈별 세대간 이해관계의 상충성과 복잡성

- 1) 모든 집단에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년 연장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2) 자동화 기술 및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젊은 세대의 높은 디지털 적응력, 의료 분야에서의 기술 신뢰도가 높은 점, 3) 모든 세대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대응이나 환경보호의식이 세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래 이슈 대응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연령별 인식 차이를 보임. 예를 들면, 1)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서는 집단간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2) 정년연장이나 노후보장 관련 이슈에서는 청년층은 일자리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고령층은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3)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인식에서도 청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기술수용에 긍정적인데, 이는 세대별 기술변화적응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고령세대의 디지털 소외 심화 현상이나 정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4) 환경 정책 수용성에 있어서도 청년층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고령층은 생활의 불편 감수에 집중함

05 결론

■ 미래사회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

- ○ 결혼, 출산·육아 정책
  - – 결혼과 출산·육아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완화와 함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양립, 가족친화적인 사회 및 기업문화 조성
  - – 단기적으로는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기업과 연계한 육아 지원 제도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관 전환 및 제도 개편 필요
- ○ 정년연장과 노후 보장
  - –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조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와 노동 구조 설계 필요
  - –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정년 연장의 사회적 영향, 정년 연장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연계한 정책 등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구조 설계, 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필요
- ○ 디지털 전환
  - – 디지털 소외 계층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 AI 신뢰성 강화 및 데이터 윤리 확립 등 필요
  - – 단기적으로는 고령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및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 디지털 접근성 강화, AI 기반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AI 규제 및 제도 마련, 디지털 인프라의 공공성 확대 등
- ○ 기후변화
  - – 세대별 수용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기후 정책과 일상생활 및 지역 중심의 친환경 정책 설계
  - –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세대별 수용성 차이를 반영한 비용 분담 모델 구축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국제 협력 강화 등

■ **미래 정책 수립 시 세대간 차이, 미래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 필요**

○ 세대간 차이 이해 및 형평성 고려 필요

- 한국의 미래 사회는 세대 간 복잡한 갈등과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이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라는 복합적 미래이슈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래 정책의 주요 의사결정 및 방향설정은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과 세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슈별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당사자적 시각 및 통합적 관점 필요(황선재, 2022)

○ 미래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설계 필요

- 인구변화,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합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
- 세대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되, 각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세대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
-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이 핵심으로,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 사회적 공론의 플랫폼 마련 필요

- 미래 이슈를 둘러싼 세대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대간 협력의 경험과 상호 이해를 촉진할 필요 있음
- 공론의 장을 통해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반 구축 필요

참고문헌

구본현·이윤석(2021), 한국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과 특성 분석, GRI연구논총, 23(2), 141-168.

박재흥(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전상진(2010), 나눔문화를 통한 세대통합, 세대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공정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 세미나 자료집, 125-136.

황선재(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ISSN | 2733-8258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